



EAI 여론브리핑 44호 보도자료



배포일 2009년 4월 19일

▣ 제목 : 동아시아연구원(EAI) · 한국리서치 4월 여론바로미터 조사결과

동아시아연구원(EAI · <http://www.eai.or.kr>)과 한국리서치(<http://www.hrc.co.kr>)는 2009년 2월부터 매월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19세 이상 전국의 남녀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CATI)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조사 주제

1. [추적] 이명박 대통령 4월 국정지지율 “34.0% 긍정적, 62.8% 부정적”

1. 7개월째 3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 영남-5060-보수지지 패턴 회귀 및 공고화
- 개신교도 48.2%, 불교도 35.8%, 천주교 25.0%, 무신론자 24.7% 국정지지
- 한나라 34.5%, 민주 14.7%, 자유선진 3.1%, 민노 6.8%, 무당파 31.2%

2. 지지율 변화의 변수 : 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나?

- 긍정 : 경제위기 리더십 > 정책과 이념이 좋아서 > 대체로 잘하는 것 같아서
- 부정 : 경제대처의 실패 > 독선적 국정운영과 소통 문제 > 정책과 이념 문제

3. 정책일관성 문제 심각하다-오락가락 정책에 불만, 정부지지층에서도 높아

-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 불만, 이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높아
- 정부 정책 방향 올바르지 않다 57.1%, 정부정책 일관성 없다 68.9%

2. [현안]Post 북한 로켓발사 : 안보불안감과 한국 핵무장

-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해야 62.7%

▣ 내용문의 EAI 정한울 부소장 (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1. [추적] 대통령 국정지지율 변화

1. 정체된 대통령 지지율 - 정당경쟁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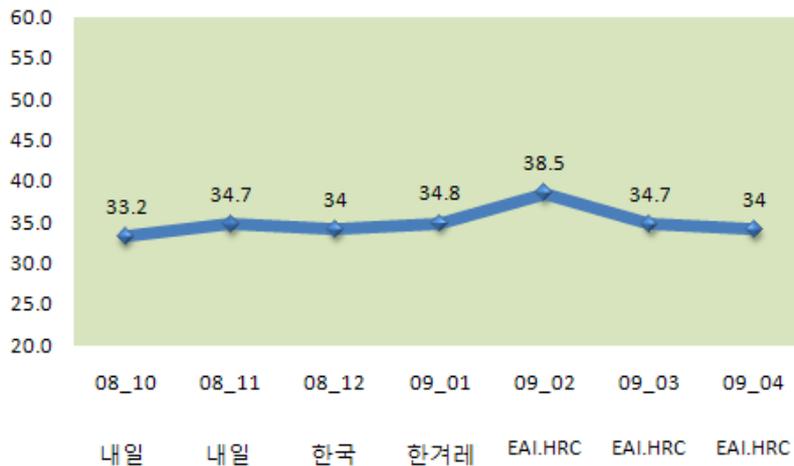
▣ 4월 조사 MB 잘하고 있다 34.0%, 못하고 있다 62.8%, 7개월 이상 답보 상태

이번 4월 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4.0%로 지난 달 34.7%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이명박 정부가 40%대로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릴 모멘텀을 확보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2008년 취임초기 10%대까지 지지율 추락했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며 30%대에 진입한 바 있다. 이후 40%대 진입여부는 정치권 및 세간의 관심사였다.

최근 한나라당 자체 조사 및 일부 ARS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언론보도로 지난 해 말부터 정부의 국정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사들이 대체로 한나라당 자체조사라는 점, 조사기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편차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전화를 통해 실시된 결과들을 추적해보면 지난해 2008년 하반기 전후로 30%대를 회복한 지지율은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박연차 게이트, 보궐선거를 둘러싼 친이-친박대결, 정동영 전장관의 탈당으로 심화되고 있는 내분의 심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사건 등 굵직한 정치현안이 줄줄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도 하락도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1] 이명박 정부 국정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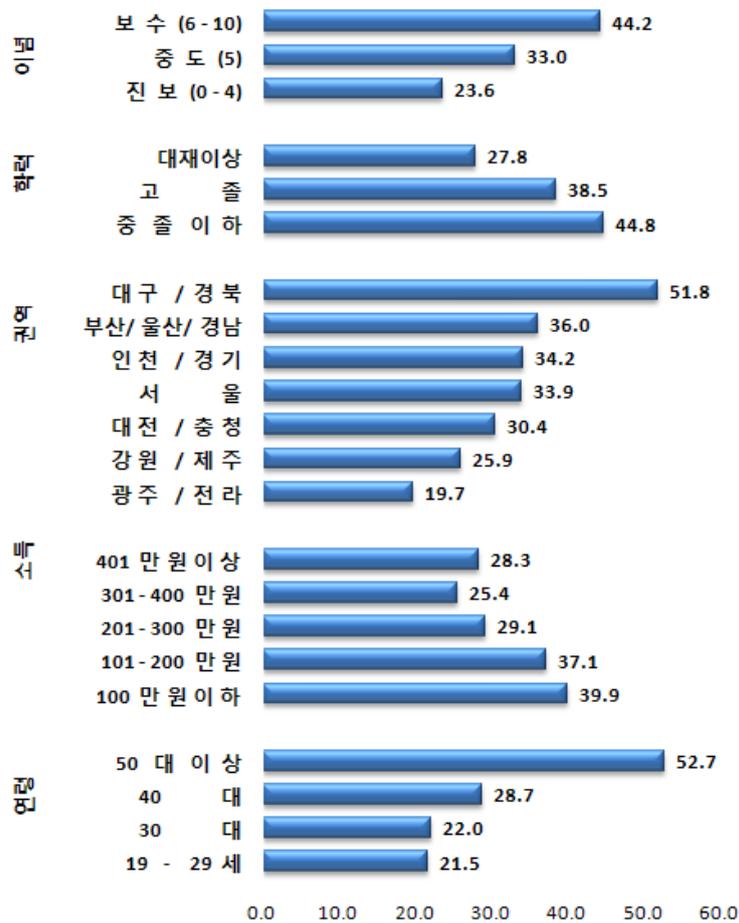


▣ 정부지지기반의 고착화 - 영남-5060-보수지지 패턴 회귀 및 공고화

개신교도 48.2%, 불교도 35.8%, 천주교 25.0%, 무신론자 24.7% 국정지지

사회집단별 분석을 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기반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달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사회집단별로 국정지지 및 정당지지패턴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국정지지, 정당지지율의 정체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림2] 사회경제변수별 국정지지율



우선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51.8% 지지를 받아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지역기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6.0%에 그치고 있다. 경기인천, 서울지역에서 국정지지율이 34.2%, 33.9%로 전체 평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기관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전/충청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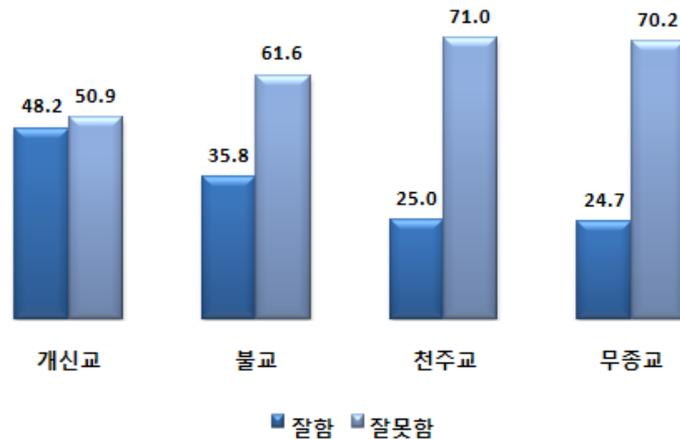
는 30.4%로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강원/제주지역이 25.9%, 광주/전라지역에서 19.7%에 머물러 정부로서는 최대의 비토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로도 20대, 30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21.5%, 22.0%에 그쳤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지지로 돌아섰던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기반으로 돌아선 40대의 28.7%만이 이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혀 현 정부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층, 세대별로는 노령층에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중졸이하 학력층에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44.8%로 가장 높았고, 고졸 층에서 38.5%, 대재 이상 층에서 24.7%로 평균 이하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다. 유일하게 50대 이상에서 52.7%로 과반수가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념적으로 보면 보수층에서 44.2%의 지지를 받은 반면 중도층에서 33.0%, 진보층에서는 23.6%에 불과하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높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종교별 국정지지



■ 분절화된 정당지지패턴 역시 고착

한나라당 34.5%, 민주당 14.7%, 자유선진당 3.1%, 민주노동당 6.8%, 무당파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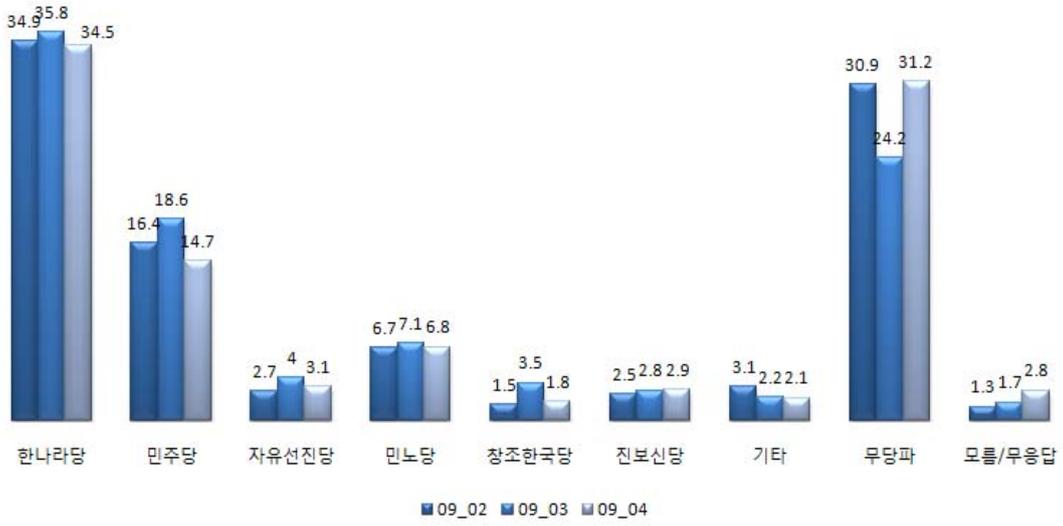
대통령 지지율에서 확인된 정체현상은 정당지지율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정당지지율을 매달 추적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거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나라당의 경우 2월 조사에서 34.9%, 3월 조사에서는 35.8%, 4월 조사에서는 34.5%로 오차범위내의 변화일 뿐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지난 2월 조사에서 18.6%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4.7%로 약간 내려앉았다.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 국민의 세명 중 한명은 기댈 정당이 없다. 동일시점에 나온 조사결과처럼 변화가 없다. 현재의 정당대결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정당대결구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과거와 같은 상대방 당의 실수에 의한 반사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박연차 리스트의 공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임박하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동영 전 대표가 탈당을 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당내 악재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큰 변화라 하기 힘들다. 당내 부패사건 및 민노총의 성폭력 은폐사건 등으로 도덕적 타격을 받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경우도 큰 지지율 변동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또한 소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군소정당들이 선거전후로 난립했던 것과 달리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군소정당이 상당한 지속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 여권의 경우 정치역학상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 등 과거 한가쪽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야권에서는 현재의 민주당이 야권을 대표하는 구심력보다는 야권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체제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30%대의 대통령, 30%대의 정당지지로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과반수 의석과 자신의 지지율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야권을 상대하면서도 국정주도권을 보궐선거에서 전패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야당은 구심점 없이 분절되어 여권과의 의미 있는 경쟁보다도 1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민주당과 10% 지지에도 못 미치는 여러 군소 야당 공히 내부 경쟁이 부각되는 형국이다. 정당 활동의 평가에 따른 지지율 변동이 생산적인 정당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핵심지지층의 최소 지지기반을 명분으로 제각각 마이웨이로 가고 있다. 우려되는 결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덧셈의 정치보다 핵심지지층을 기반으로 분화되어가는 뺄셈 정치의 고착화다.

[그림4] 정당지지율 변동



2. 지지율 정체를 깰 변수: 경제위기 극복과 정책 추진방식의 변화가 필요
 - 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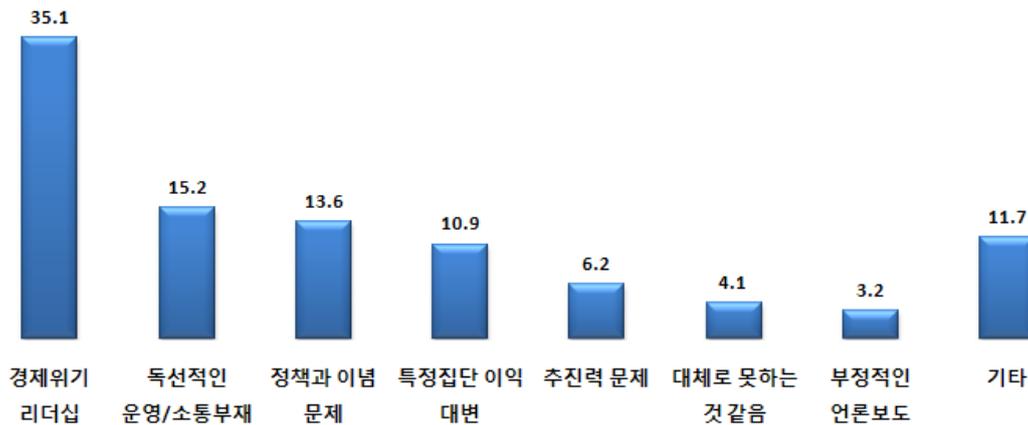
- 긍정 이유 : 경제위기 리더십 > 정책과 이념이 좋아서 > 대체로 잘하는 것 같아
- 부정 이유 : 경제대처의 실패 > 독선적 국정운영/소통 문제 > 정책과 이념 문제

국정지지율의 담보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지지율 변화를 가져올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지하거나지지 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그림1]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이유 (272명)



[그림2]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하지 않는 이유(502명)



우선 이명박 정부의 국정평가에 긍정적인 응답자 272명 중에서 지지이유로 ‘경제위기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정책과 이념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13.3%였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명박 정

부가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보다는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대체로 잘하는 것 같아서’가 8.9%, ‘응답을 안 하거나 못한’ 응답자가 8.6%,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7.8%였다. 그 외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낫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 ‘아직은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도 5.7%였고, 기타가 16.2%였다.

이명박 정부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로는 역시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리더십’을 꼽은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나 소통의 부재’를 지적한 응답자를 합하면 15.2%였다. 한편 ‘정책과 이념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는 13.6%,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다’는 응답은 10.9%이고, ‘공약이 지켜지지 않거나 정부가 말만 앞세우는 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합해서 6.2%였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경제위기의 극복여부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최대 변수라 할 수 있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과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모두 공히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리더십을 판단근거로 삼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 경우 지지율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치 스타일의 변화가 국정지지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된다. 통치스타일의 변화 중에서 특히 독선적인 국정운영방식과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지지기반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소위 일방적인 국정운영방식과 소통의 부재 문제는 이미 집권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지적들이라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전체국민과의 소통이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이 소홀하다는 비판은 간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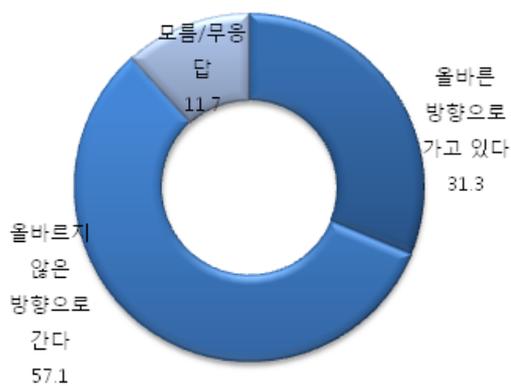
셋째,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경제문제 및 제반 외교정책 등에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했던 공약과 정책을 현재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정,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책적 일관성과 추진 성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부와 대통령의 정책드라이브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적지 않은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책일관성 문제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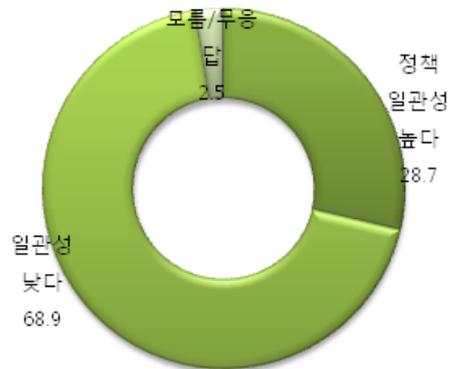
-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 뿐만, 이대통령 지지층에서도 높아
- 정부 정책 방향 올바르지 않다 57.1%, 정부정책 일관성 없다 68.9%

추진력을 브랜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정책적 추진력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4월 조사에서 정부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가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7.1%가 올바르지 않다고 답해 정책방향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무려 68.9%가 일관성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

[그림1] 정부 정책의 방향 평가



[그림2] 정부 정책의 일관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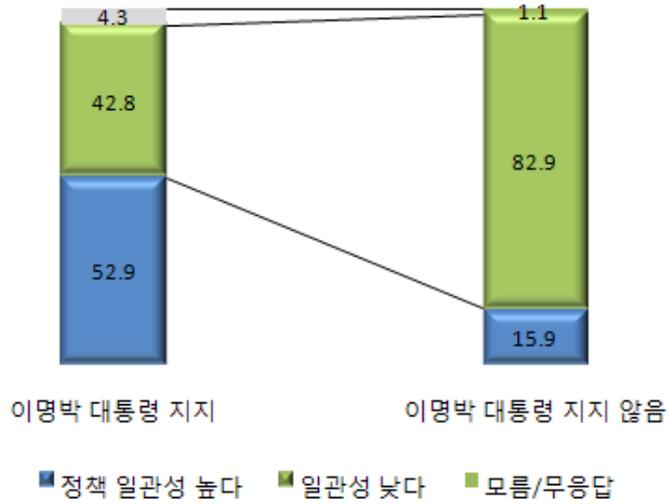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실적을 강조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양도세 계획은 변경, 자동차 세제 지원책, 안보영역에서도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한국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가입 등 최근 파괴력 있는 정책결정을 해놓고도 최종 입안이나 집행단계가 가까워지면 정부 내에서 번복되거나 여당의원들에 의해 번복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불만은 현 정부의 최대지지기반인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은 상당한 불만이 쌓여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여부에 따라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평가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를 하지 않는 응답자 중 15.9%만이 정책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한 반면 무려 82.9%는 현 정부의 정책일관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지지층에서는 정책일관성이 높

다는 의견이 52.9%에 달했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부정적인 응답은 42.8%에 그쳤다. 확실히 이대통령 지지기반에 속하지 않은 응답자들과 인식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만 이명박 지지층에서조차 열명 중 네명은 현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3] 국정지지별 이명박 정부 정책일관성 평가(%)



2. 북한 로켓발사 이후 안보인식과 핵무기 보유 여론

- 북한 로켓 발사, 안보상황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작아
- 한반도 안보상황 불안하다 32.8%, 3월보다 3.4% 포인트만 높아져
- 한국도 핵무기 가져야 62.7%, 2005년 보다 12%포인트 올라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과 방어 개념의 미사일 전력 증강(MD)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 주장도 가세하고 있다. 정부나 언론의 분주한 대응과 달리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도 국민들의 안보상황 인식은 비교적 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32.8% (매우 불안하다 6.3%, 대체로 불안하다 26.5%)로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인 30.1%보다 2.7% 포인트(P) 높았을 뿐이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6.4%였고 모름/무응답이 0.8%였다.

지난 3월에 실시한 여론바로미터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소 불안하다는 응답이 늘어났지만 폭 폭의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3월 조사에서는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29.4%였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4.4%였다. '보통'이라고 중립적으로 답한 비율은 35.6%였고 '모름/무응답'이 0.6%였다. 4월 조사결과에서는 '불안하다'는 응답비율의 경우 3.4% 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의 경우 4.3% 포인트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북한 로켓 발사라는 대형 북한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담담했다는 의미다. [그림 1]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연령·거주지역·이념성향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우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높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여성의 경우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35.1%였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6.7%였다. 보통이다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37.3%와 0.9%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불안하다는 경우가 30.4%였고 불안하지 않다는 경우가 33.5%였다. 보통이다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35.5%와 0.7%였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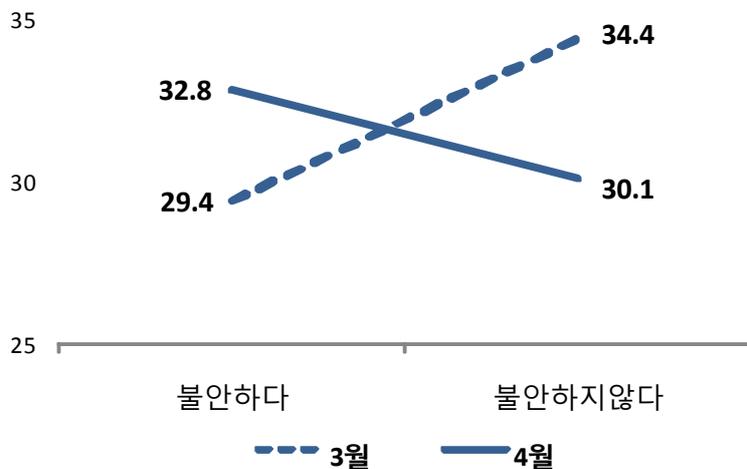
연령대별로는 19세에서 29세까지에서 불안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만을 살펴보면, 19세에서 29세에서 38.9%였다. 30대에서는 32.9%, 40대에서는 34.2%였다.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28.0%가 불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불안하다고 답한 결과와 반비례하였다. 19세에서 29세에서는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22.0%였다. 30대에서는 28.3% 그리고 40대에서는 31.2%였다.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35.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림 3]

거주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들의 안보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제주와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들의 안보 불안감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에 있어 광주/전라 지역은 42.1%였다. 서울은 35.3%, 부산/울산/경남이 33.0%, 강원/제주와 대구/경북이 31.5%였다. 인천/경기는 29.6%였고 대전/충청 지역의 경우 27.7%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는 강원/제주가 38.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경북으로 37.3%였으며 차례로 인천/경기(32.6%), 대전/충청(30.5%), 부산/울산/경남(29.6%) 그리고 서울(26.8%) 순이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19.6%만이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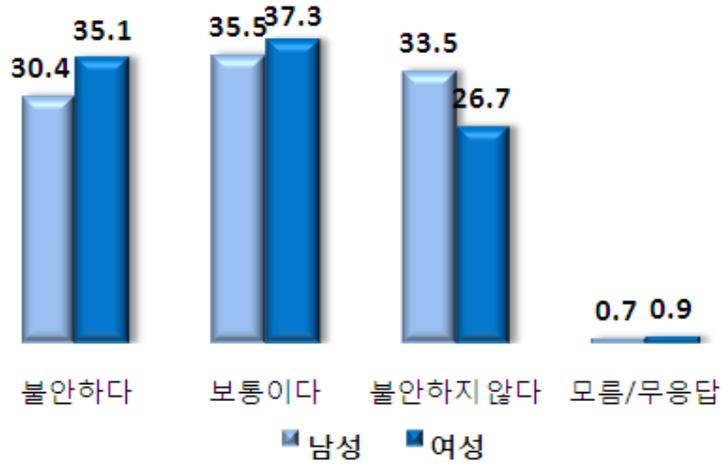
이념성향에 따른 안보 불안감을 비교해보면 우선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중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34.4%,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27.6%였다.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30.9%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27.6%가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경우에는 32.9%가 불안하도 답해 중도층과 진보층의 국민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36.6%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북한의 핵문제 및 로켓발사에 단호한 대응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선호하는 보수층과 고연령층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을 꺼려하는 진보층과 젊은세대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그림 1] 3월·4월 안보상황 인식 비교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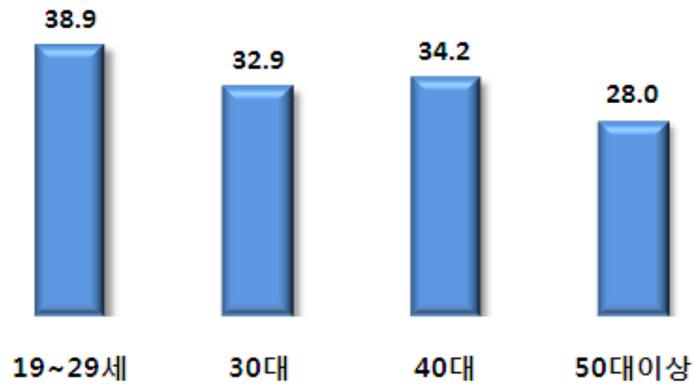


* 보통이다와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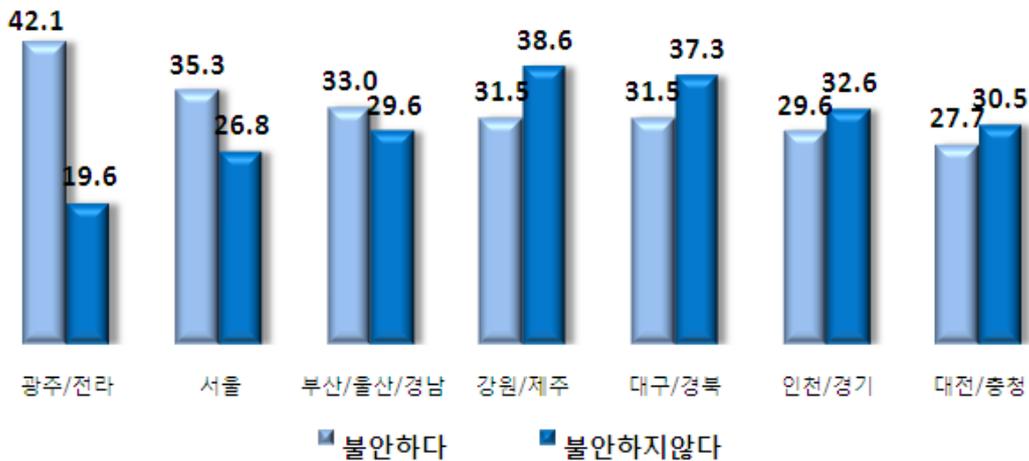
[그림 2] 성별 안보상황 인식 비교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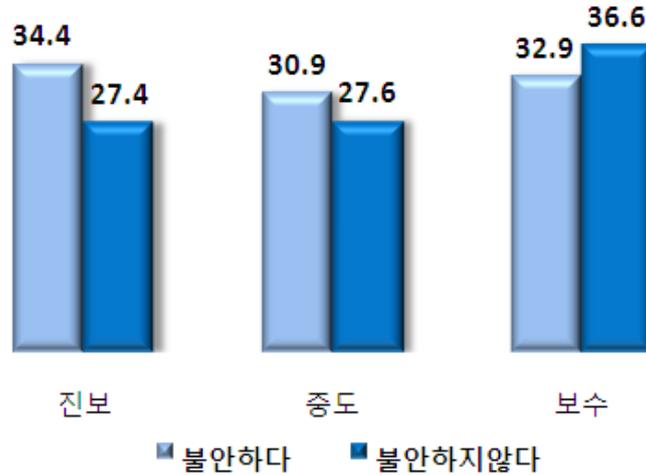
[그림 3] 연령대별 안보상황 "불안하다"인식 결과 (단위 : %)



[그림 4] 지역별 안보상황 인식 결과비교 (단위 :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5] 이념성향별 안보상황 인식 결과비교 (단위 : %, 모름/무응답 제외)



북한 로켓발사, 핵 경쟁 여론 높여

-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해야 62.7%, 2005년보다 12.0% 포인트 증가
- 안보상황 “불안하지 않다”에서 핵무기 보유 지지 오히려 높아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정부의 대응책이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국민들 역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경우가 62.7%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35.4%였다. ‘모름/무응답’은 1.8%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북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004년 동아시아연구원이 중앙일보와 미국 시카고외교협회(CCFR)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2004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50.7%였다.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비율은 49.3%였다. 5년이 경과한 현재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비율이 12.0%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그림 6]

주목할 점은 안보불안 요인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경우 중 핵무기 보유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비율은 62.6%였다. 반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는 68.8%로 불안하다고 답한 경우에서보다 6.2% 포인트 오히려 더 높았다. 핵무기 보유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을 보면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층에서 35.5%로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29.6%보다 5.9% 포인트 높은 결과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70.9%로 여성의 경우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비율 54.8%보다 16.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9세~29세의 경우에는 45.8% 그리고 30대에서는 60.4% 동의한다고 답했다.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동의비율이 더욱 높아져 각각 69.9%와 69.6%가 핵무기 보유 주장을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경우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66.5%로 나타났다. 중도에서는 62.5%였다. 이념적으로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들에서조차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은 59.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층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대체로 다수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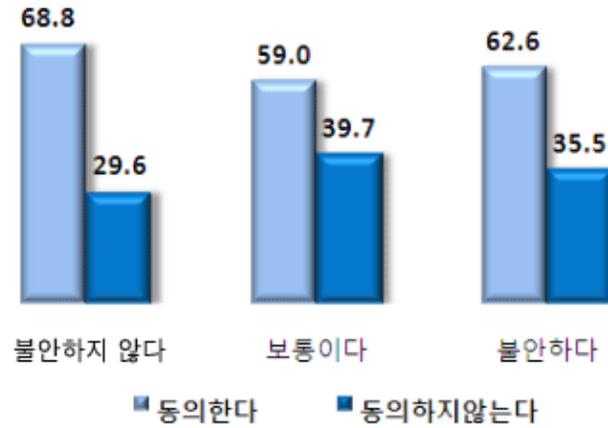
현재 한국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 및 로켓발사 이후의 안보문제에 대응에 분주하다. 문제는 PSI 가입은 물론 MD체계 구축,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제한된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사거리 확대 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 및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려한 대로 북한 로켓 발사는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서 군비확장과 핵 경쟁을 촉발시킬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국민 여론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준다. 물론 이러한 국민여론이 정부로 하여금 당장 핵무기개발이나 군비확장에 나서게 하는 현실적인 압박요인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림 6]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 지지 인식 (단위 : %)



* 2004년 자료 : EAI · 중앙일보 · CCFR
 ** 2004년 조사의 경우 보기 구성은 “예” “아니오”였음
 *** 모름/무응답은 제외

[그림 7] 안보인식과 핵무기 보유 지지인식 비교 (단위 : %, 모름/무응답 제외)



[조사개요]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5\%$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11.7%
조사기간	● 2009년 4월 1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